

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중 “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0조제4항에 따라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해야”로 한다.

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구제명령의 이행기간) ①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(이하 “구제명령”이라 한다)을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은 구제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이행기간을 90일 이내로 한다.

제23조의3(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, 납부기한, 징수절차) ①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(이하 “이행강제금”이라 한다)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처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에는 10일

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처분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천재·사변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.

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.

제23조의4(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)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23조의5(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)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교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

2. 천재 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

제23조의6(이행강제금의 반환) ①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.

③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.

제23조의7(권한의 위임) 교육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

2.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

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”를 “같은 영 제19조제1호·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육부장관(제23조의7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

포함한다)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에 관한 사무
 2.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
-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(제23조의4 관련)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이행강제금 금액			
		1회	2회	3회	4회
채임용거부, 파면, 해임, 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	법 제10조의4제1항	1,000	1,300	1,600	2,000
정직 및 강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	법 제10조의4제1항	500	750	1,000	1,400
감봉, 견책 및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	법 제10조의4제1항	300	500	700	900
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	법 제10조의4제1항	200	300	400	5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행정소송 결과의 통보) 청구인이 <u>법 제10조제3항의 규정</u> 에 <u>의하여</u>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<u>당해</u> 소청사건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소송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<u>통보하여야</u> 한다.	제23조(행정소송 결과의 통보) -- ---- <u>법 제10조제4항에 따라</u> - ----- ----- 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-- <u>통보해야</u> ----.
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2(구제명령의 이행기간)</u> ① <u>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(이하 “구제명령”이라 한다)을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은 구제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이행기간을 90일 이내로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3(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, 납부기한, 징수절차)</u> ① <u>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</u>

4에 따른 이행강제금(이하 “이행강제금”이라 한다)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써 미리 처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처분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천재·사변, 그 밖의 부득

<신 설>

<신 설>

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.

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.

제23조의4(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)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23조의5(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)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교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

<신 설>

<신 설>

2. 천재 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
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
하기 어려운 경우

제23조의6(이행강제금의 반환) ①

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계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의 확
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
되면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
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
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
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
다.

② 교육부장관, 교육감 또는 관
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
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
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
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
에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
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
산금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
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.

③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
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
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.

제23조의7(권한의 위임) 교육부장

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

제24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·탈퇴,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호의 권한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

2.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

제24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-----

----- 같은 영 제19조제1호·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교육부장관(제23조의7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,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

	<u>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 <u>1.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에 관한 사무</u> <u>2.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</u>